

문현철 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광역시 지방선거 공약

1.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광주형 기본소득

● 제안 배경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불평등 해소와 사회경제 전환
-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
-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기본소득 등 범주형기본소득의 형식으로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 제시. 범주형 기본소득에서 시작하여 임기 내 전 시민 기본소득으로 확장.

● 광주형 기본소득 설계 및 예산 추계

구분	광주형 기본소득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아동·청소년(0세~18세) 인구	248,164	
지급액(원, 월)	100,000	
예산(억 원, 년)	2,978	
광역지자체 부담	0	
청년·노인 기본소득		
청년(19~29세) 인구	220,436	
노인(65세 이상) 인구	215,662	
지급액(원, 월)	100,000	
예산(억 원, 년)	청년	2,645
	노인	2,588
	합계	5,233
광역지자체 부담(A)	2,617	

농어민수당	
농어민 인구	39,923
지급액(원, 월)	100,000
기본소득 예산(연, 억원)	479
기 편성액	0
추가 소요액	479
광역시자체 부담(B)	240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문화예술인 인구	3,176
지급액(분기, 원)	300,000
광역시자체 부담(C)	38
예산합계액(연, 억원) (A+B+C)	2,894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전액 국비 사용

※청년·노인 기본소득 예산은 광역 : 기초 지자체 1:1 비율로 마련하고, 문화 예술인 창작수당은 광역 지자체 전액 부담

● 광주형 기본소득 예산 추계액의 실제 예산 비중

단위: 억 원

구분	광주
기본소득 예산(A)	2,894
일반회계 예산(B)	56,702
총예산(C)	70,094
A/B	5.1%
A/C	4.1%

● 광주형 기본소득 포함 공약 이행 위한 재정안

단위: 억 원

구분	광주
총예산	70,094
일반회계 예산	56,702
기본소득 예산(A)	2,894

순세계 + 재정안정화기금	619
지출구조조정	3,505
지방세 등 세입증대	2,835
재원 합계(B)	6,959

2. 모두가 춤추는 도시

● 제안 배경

- 광주를 창조적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 광주시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문화생활의 다양성을 장려.
- 디지털전환으로 이전과 노동방식이 달라지는 시대에 일자리 수 만개 늘리겠다는 허황된 처방이 아니라 노동을 축소하고 문화와 쉼이 확대될 수 있는 비전 제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생계 위협에 처한 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어떤 재난 상황에도 창작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광주시가 든든하게 지원
-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늘리고, 문화예술 접근성을 늘려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광주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

● 공약

- ① 문화예술인 코로나 손실보상
 - 문화예술인의 코로나 손실 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손실 보상
 - 재난 시 예술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TF 구성
 - 「문화예술인 재난지원조례」 제정. 재난시 문화예술인의 손실보상과 재난지원,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
- ② 광주형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 지역 문화예술인에 생존권을 보장하고 창작활동 지원, 보편적 예술 활동을 고무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등록기준에 등록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분기별 30만원 창작 수당 지급

- 도입 시에는 예술인등록기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수당을 시작 하되, 이후 창작 활동을 하는 모든 시민들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논의.

③ 광주시 문화·예술 공유지 (예술인 마을) 조성

- 금호타이어부지, 광주전남방직 부지 등 후적지를 광주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로 활용. 미술관, 극장, 갤러리 등 예술창작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모든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 사용 임대료와 대관료 지원.
- 이를 통해 문화예술 광주 지역 브랜드를 구축. 더 나아가 지역브랜드 자산을 광주시나 특정 개발사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공유지분형 도심재생 추진.
- 지역브랜드 자산가치 상승과 도시재생에 기여한 문화예술인, 상인에게 참여수당 형식으로 브랜드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이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지급. 쉼트리피케이션 방식을 위한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추진
- 예술 분야별 공간 수요 조사 및 광주시 산하 유희공간 파악
- 시 산하 문화/예술/마을 유희공간 개방 및 임대료/대관료 지원
- 공간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포함한 지원 확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통해 예술인 공공임대 주거 모델 도입

④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

- 광주시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기본조례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
- 광주시의 문화예술인 권익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작성 의무, 예술인 권익지원센터 설립 등 규정
-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노동, 장애, 권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 문화예술계 미투, 블랙리스트, 노동 현안 파악 및 대응
- 문화예술인의 산업재해와 고용보험 지원, 지자체 공공부문 발주 지원 등 시행

⑤ 광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광주형 기본소득, 창작수당 확대를 통해 광주 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학교 문화예술 교육/시민 문화예술 교육 의무화 및 접근성 확대

⑥ 광주형 콘텐츠 창작 지원

- 예술인 커뮤니티 사업 지원, 복합·예술 시설, 장비, 인력 육성을 통해 광주형 콘텐츠 창작 지원
- 광주시 ‘시민예술센터’ 설치. 공연, 전시, 상영, 작업, 교육 공간 확보. 공간의 활용은 문화예술정책 전문가, 지역예술인, 시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시민문화네트워크’ 담당
- 주요 지자체별 ‘음반과 영상물’ 전문 미디어도서관 설치, 기존 도서관에 음반과 영상물 함께 구비

⑦ 문화예술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실현

- 장애예술인 지원센터 설립
- 장애인 이동지원, 공연장 셔틀버스 확대
- 장애예술인 교육환경 조성
-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지원 사업 확대

3. 차별금지에 앞장서는 도시

① 청소년·학생 인권 보장

● 제안 배경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이며, 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등 청소년·학생 인권 관련 자치법규가 잘 정비 되어있는 광역시. 2020년 4월에는 ▲집회의 자유 ▲교내·외 활동 참여권 ▲혐오표현금지 ▲현장실습학생과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자치권 ▲인권교육 등 강화된 규정들이 담겼음.

그러나 여전히 두발 단속,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학생들의 자율성 침해 사례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학교 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인권 보호를 전담할 기구의 미비 등 조례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뿐만 아니라 2018년 스쿨미투 이후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음. 스쿨미투가 터지고 가장 많은 성비위 교사가 적발된 지역은 인천과 광주였음. 2018년 당시 전수조사로 적발된 광주지역 중·고교 스쿨미투 성비위교사는 54명을 넘어섰고, 대부분이 형사절차를 통한 징계로만 그쳤음. 재발 방지 대책과 학내 성평등 문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함.

● 공약

- 광주시 학생 인권 구제 체계 마련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전담기구’,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 등 학생 인권 구제 체계 마련 조항 삽입. 인권 구제 체계를 통해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용의복장규정, 핸드폰 수거 등)에 적극적인 시정 조치 실시.

- 차별금지 학칙 제정과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마련

광주 내 모든 초·중·고·대학에 인권 센터 설립 및 차별금지 학칙 제정. 교육 기관 내 학생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주기

적으로 교육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청소년 차별 경험 실태조사 및 구제 방안 마련.

- 포괄적 성교육 도입

생식 위주의 이성애 관계를 모델로 한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성과 재생산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며,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언어 등을 고려한 포괄적 성교육안을 교육청과 협업하여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지원을 재학생이 받는 교육 수준까지 확대 (연 1,000여만 원)

공교육 외 어디에서도 배움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교육 기관 공적 재정 지원 확대

-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청소년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성소수자 청소년 대상 상담 지원.

24시간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권역별로 설치.

쉼터 내의 불합리한 생활수칙 등을 폐지하고 개인화된 주거 지원

② 장애인 인권 보장

● 제안 배경

광주시는 탈시설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광주시는 장애인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16년 전문가,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 TF를 꾸려 2017년 ‘광주광역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 이를 통해 5년간 137명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내걸고 △자립생활 체험 및 훈련 △건강관리 지원 등 세부사업 추진. 하지만 2020년 기준, 완전 자립을 달성한 장애인은 37명에 불과.

광주시 내 장애이동권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광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배차 기준의 89.9%만 충족하고 있음. 운영 방식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며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음. 저상버스 역시 2022년 말 기준 전체 버스의 35% 정도

마련될 예정으로 교통약자법의 범정의무대수인 50%에 미치지 못함. 양동시장 등 도시의 많은 공공시설에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험한 장애인 리프트들이 잔존해 있는 상황.

이 외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표소로 인해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연이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사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공약

-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추가 지원체계개편 및 지원 확대 (시 추가 지원 구간 신설 / 24시간 지원 확대 / 65세 이상 노령장애인 지원)

광주광역시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및 실효성 있는 2차 광주광역시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시행,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탈시설-자립지원 전담팀 구성 및 전문관 배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거형 주택 마련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금 증액

-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

광주광역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제정

장애 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장애 여성 교육 및 모성보호, 보육, 건강, 고용 지원 강화

장애 여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제4차 광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장애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저상버스 법정 도입 대수 이행

교통약자이동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 대수 이행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대한 조례 제정

장애인 진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구축

노령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③ 성평등 실현 및 젠더 폭력 근절

● 제안 배경

광주시 민선7기 성평등 정책은 대부분이 취약 여성에 대한 보호 정책과 이성에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한 ‘건강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추진체계는 복지교육국 내의 여성보육과인데, 성평등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함. 하지만 이체는 소위 ‘요보호 여성’, ‘취약 계층’, ‘위기 가정’ 등을 선별하고 낙인하고 이들에 대한 시혜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을 넘어서 성평등의 가치가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성주류화 전략이 필요.

더불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미비한 상황. 직장 등에서의 성희롱, 공공부문 내 성폭력, 예술계 미투, 온라인 혐오 등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적인 문화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약

-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본청에 성평등 정책실 마련
- 생활동반자 조례제정: 지자체 내 생활동반자제도 도입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고 주거정책, 복지정책을 생활동반자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가족을 포괄하도록 설계
- 이성에 정상가족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적가족 지원 센터로 전환. 다채로운 시민결합을 지자체가 장려하고 지원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광주 퀴어문화축제 공식 지원
-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성착취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 인력과 예산 확대.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 광주시 혐오표현 피해 방지 조례 제정
- 공직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 성폭력 피해자 주거 및 소득 지원체계 구축. 개인화된 주거 지원.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상담과 지원센터의 종사자 확대

- 광주형 성별임금공시제도 실시. 현재 광주시는 광주지역 21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점차 민간기업에 확대. 광주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별 임금 및 직종분리가 심각한 민간기업 시정조치.
- 광주형 남성육아휴직 필수보장제 실시.

4. 탄소중립 선도 생태도시

● 제안 배경

-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의 기지였던 광주, 이제는 멸종과 기후변화에 맞선 생태전환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함
- 광주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국가의 재정, 기술 지원을 받아내도록 함
- 바르셀로나시의 그린뉴딜에서 착안하여 1인당 온실가스 45% 감축, 1인당 1m² 녹지 확보, 0% 에너지 빈곤층을 목표로 한 광주형 그린뉴딜 시행

● 공약

① 광주형 그린뉴딜 시행

- 2045 탄소중립 2030 에너지 자립 목표로 탄소중립 시범사업 시행
- 국가 탄소중립 진흥원을 광주에 설치
- 기후대응기금 예산 마련, 탄소인지예산제 시행
- 지역 내 공공 녹색은행 설립으로 녹색금융 시행: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탄소포집, 전력저장장치(ESS), V2G전력망 등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테크 기업 중심 대출.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담보대출 시행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치를 금리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등 녹색금융 시행
- 광주시 차원 제로에너지빌딩 및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 시행
- 친환경차 100%보급, 주택과 건물 태양광 보급
- 지역 내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전면 적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전력 사용 효율화 추진

② 탄소중립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제정. 태양광 등 에너지협동조합, 전기자동차 카 셰어링 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
- 에너지전환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전환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

③ 녹색 생태 도시 재생

- 광주지역 내 폐공장 및 오래된 시설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자원순환성 고려한 녹색클러스터 구축
- 생물종·생태계 대조사 시스템 구축
- 지역의 자연보호지역 또는 지역기반보전수단 발굴, 지역 중심 생태 참여수당 활성화
- 자연 휴식년제 등 자연 회복력 강화 활성화
- 대규모 어획, 남획 및 어구 쓰레기 규제 촉구
- 자전거 도로 확대

④ 동물 공존

- 공장식 축산 점진적 폐지 지역 모델 사례 발굴과 확산.
-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거래의 금지
- 반려동물 산업 축소와 규제,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를 생추어리 형태로 전환

5. 투기 막고 주거권 보장하는 도시

● 제안 배경

- 학동·화정동 참사 발생.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리와 부실공사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남. 부동산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도시 정비 사업에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참사임.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막고, 이윤이 우선되는 재개발·재건축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소수의 건설사, 건물주의 배불리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모든 광주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

● 공약

- ① 학동·화정동 참사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개정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 및 매뉴얼 시행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재난에 의한 사상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 매뉴얼 마련
 - 암행감찰 기능 강화, 합동점검 강화 등 안전관리 상시 체계 마련
 - 광주시 기존 도시계획의 안전성 집중 재검토
 - 학동·화정동 참사 관련 회의록 전부 공개
 - 학동·화정동 참사 추모공간 조성, 피해자 및 유족 재난 회복 지원 확대
 -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시 건설업체 등록말소를 위한 제도 마련
- ② 재건축 초과이익 기본소득 재원 활용, 비리 막는 공공주도 순환재개발 추진
 - 도시 정비 사업에 있어 공적 개입 강화. 공공주도의 재개발 시행
 - 도시정비사업에 사용토록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교부금 50%를 지역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 공공주도의 순환재개발 시 임차인의 참여 보장
 - 주택단지 재건축, 재개발 시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건축 의무화
 -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이익 중심의 현행 재개발 정책 대신, 노인·장애

인·탈가정 청소년 등 모두를 위한 주거 환경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③ 광주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거용 건물만 낮은 비용으로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 토지임대부 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 광주시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비중 확대
- 구체적인 목표 등을 추후 보강

② 최저주거기준 상향, 주거 빈곤 해결

-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매입 리모델링 사회주택 시행
- 광주시 「주거기준조례」 최저주거기준 상향
- 무주택자 중 소득하위 50%에 대한 주거 개인 예산제 연간 100만 원 도입

6.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서비스

● 제안 배경

- 기본소득과 함께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구축하여 선진 복지 도시로 나아가감

● 공약

① 누구나 데이터

- 주민들이 모이는 주요 거점에 무상 와이파이 확대
- 이동통신 최소 5GB 데이터 기본권 보장
-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보장

② 누구나 건강

- 광주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 3.0% (전국 5.7%, 특·광역시 3.7%),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 7.2%(전국 10.0%, 특·광역시 8.4%)로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 인력체계 개편 및 공공병상 30% 달성
- 여성,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환경 구축. 광주시 내 모든 보건소와 공공의료시설에 젠더건강증진센터 신설. 임신중지, HIV감염 등 여성과 성소수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 진료 및 상담을 익명 무료로 실시
- 모든 여성 대상 월경용품을 바우처 방식으로 무상 제공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지방의료원 산부인과 필수 개선 추진
- 병의원과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임신중지 유도약물 처방과 진료 가능토록 함.
- 누구나 입소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③ 누구나 복지

- 주거급여 자기부담금 폐지 촉구
-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돌봄 추진. 장기요양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돌봄 비용 본인부담금 최소화